

민주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정농단... 국조·특검 추진”

중점 변경 시도 ‘김건희 로드 게이트’ 규정 직권남용 진상규명 필요 국힘 “민주당이 괴담 만들어 헛발질... 양평군민들 지탄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중점 변경 시도 의혹을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규정하며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언급하는가 하면 ‘사업 백지화’를 돌린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해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면서 대형 국책사업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출구 전략도 들여다보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

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으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어느 선까지 개입된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 장관이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고위원들은 원희룡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야당의 가짜뉴스와 선동 때문이라고 역지를 부렸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아니면 과당유보부 장관이나. 112신고를 한 시민을 도둑이라고 지목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괴담을 유포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즉시 장관직을 사퇴하고, 정치도 그만두라”고 쓰아붙였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어린애가 흥분해 투정 부리듯 백지화 선언을 해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국토부 장관을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원 장관 경질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 시민단체들과 함께 범국민 대척위원회 구성 및 서명운동 추진에도 나서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에 원 장관과 그 뒷선인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

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죄 등 불법 비리 의혹이 있다”며 “이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보며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놓고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완전히 가짜뉴스와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하다가 양평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출구전략으로 주민투표·여론 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우리가 아닌) 민주당 쪽”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백지화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주민투표·여론조사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예비타당성 통과 안)과 정부가 추진한 변경안 등을 두고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이 방안을 순수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일본 간野 “오염수 방류 철폐하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도쿄 교외다구 총리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투표용지 지역구·비례 구분 법제화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야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연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

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돼야 한다.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것 하나에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증금을 배분·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섬 지역 ‘교통·교육·주거·복지’ 정주여건 개선

서삼석 ‘면섬 지원법’ 대표발의

국토의 외곽인 면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양·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외곽 면섬 지원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입법에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 470개에 비해 6개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도 1,172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 주민의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섬의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의

로 289개(62.3%)·보육 및 교육 354개(76.3%)·복지 201개(43.3%)·문화 여가 302개(65.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컸다. 목포 기준으로 신안 거제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 140km, 운항비용 6만200원, 4시간50분이 소요되는 반면, 서울까지 KTX로 이동시 거리 373.8km, 요금 5만3100원, 2시간 23분 등이 걸렸다. 거리는 거제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섬에 대해서는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면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野 의원 182명 “이상민 탄핵 필수” 최종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이태원 참사 대응·수습 책임자 역할 못해”

야당은 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김남국 박완주 양정숙 윤관석 윤미향 이상민) 등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중을 울릴 것”이라고 했다. 또 “이태원 참사는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사회 재난”이라며 “피청구인 파면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월 9일 현재에 접수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3 - 32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채용공고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산하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를 이끌어 갈 유능한 센터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제)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

- 응모자격**
 - 가. 공통자격 요건
 -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사람은 가능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기타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f.kr) 공고문 참조
 - 나. 기본자격 요건(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생물 관련분야 전공자로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공무원(상당직 포함)이상으로 투자유치 또는 바이오산업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바이오산업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사업체의 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위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채용형태 및 보수수준**
 - 가. 채용형태 : 전임계약직 기금(3년 계약)
 - ※ 경쟁성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 가능
 - 나. 보수수준 : 경력 등을 감안 협의조정
- 심사방법**
 - 가.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학력, 관련분야 실적, 리더십,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심사 · 평가
 - 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PPT로 발표 10분 내외)
 - ※ 센터 운영 방안, 센터운영으로서의 자질, 문제해결 능력, 직무수행계획 및 사업추진 능력, 윤리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평가는 면접전형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4 채용일정**
 - 가. 응시원서 접수
 - 1) 기 간 : 2023. 7. 13.(목) ~ 7. 20.(목) 18:00까지
 - 2) 장 소 : (제)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 나주시 교육길 13(빛가람동 353-1) 스마트파크 D2동 210호
 - 3)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나. 1차(서류심사) : 2023. 7. 24.(월) ※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다. 2차(면접심사) : 2023. 7. 31.(월) ※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개별 통지함
 - 나. 면접심사 : 2023년 5월 30일 ~ 2023년 6월 29일 (최초 공고로부부터 3개월)
- 5 제출서류**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f.kr) 공고문 참조
- 6 기타사항**
 - 가. 응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제출 원칙, 단 공고일 이전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1명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 절차를 추진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후 합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사.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행정지원실(061-339-1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광주광역시북구 공고 제2023-122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206-1번지 일원의 「주방법, 제1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주방법, 제19호 제1항 제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3호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11.

광주광역시북구청장

- 사업개요**
 - 사업 명 : 용두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206-1번지 일원
 - 계획규모 : 사업면적 23,358㎡ (공동주택 및 주차장면적:16,956㎡, 도로:6,402㎡)
- 열람개요**
 - 열람기간/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3. 7. 11. ~ 7. 25)북구청 공동주택(별관1, 2층)
 - 열람내용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률	비고
		기정	변경		
용두동 4구역주택조합 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206-1번지 일원	-	823,268	23.36%	-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 가.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다. 회차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관련도시 : 계획생애(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인에게 보임)**
- 의견제출**
 - 의견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동주택(별관1, 2층)
 - 의견 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외의 기 타 서면 또는 유선(인터넷을 통한) 제출
 - 유선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유치로 7(용두동) 광주주택과 행정실(mody97@korea.net)
 - 제출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아래우편)의 경우 만료일 18시 도착분까지 유선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동주택(062-410-0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 (금) 안내

- 위 치 :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 부 지 : 약 1,700평
- 가 액 : 9억

- 약사여래불 6m 있습니다.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108 돌탑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범위 바로 가능
- 답사 후 절중가능

문의 033-562-0448
휴대폰 010-3832-4317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영조 또는 관리자는 아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의 묘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개장 : 2023년 5월 30일 ~ 2023년 6월 29일 (최초 공고로부부터 3개월)
- 개장방법 : 유원분묘 - 영조와 협의 개장
- 유원분묘 - 영조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영조 개장
- 영조개장 : 상삼포공립묘장(함평군 함평읍 함평로 933-49)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 공고기간 : 2023년 5월 30일 ~ 2023년 6월 29일 (최초 공고로부부터 3개월)
- 신고 및 문의처 : (주)인원주택 010-8025-5078
- 신고시 구비서류 : 영조개장을 입증하는 서류, 재확인증 기안.
-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방이 관련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후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3년 7월 11일
위 고 공 인 : 토지 소유주 (주)인원주택 010-8025-5078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06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7월 11일
케이제이팜 주식회사 (KJ Pharm Co., Ltd.)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53-14 (중흥동)
청산인 정기 배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혜자(570812-XXXXXXX)
- 최후추수 : (여수시 소호5길 39, 305동 102호 (소호동, 죽은골휴아파트))
- 등록기준지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곡리 167/4번지

피상속인 망 김혜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청법원 승천지원 2023-년 267호로 신청하여 2023년 7월 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7월 11일

- 상속인 : 차창윤(020408-XXXXXXX)
여수시 시청서4길 40-3, 303호(약동)
- 신고기간 : 2023. 7. 11. ~ 2023. 9. 20.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차창윤의 주소

산행안내

7월15일(토)
▲광주조산회 (제)655차 정기산행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 월령 트레킹) 오전 03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3시 40분 진월동 육교 밑 03시 45분 백운우체국 03시 50분 롯데백화점 04시 예술회관우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